



대화는 끝났다
이제 투쟁이다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 관련기사 8면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6~7면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5면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4면

산업안전법 안 지키는
정부와 독가스 배출하는
현대제철

2면

다양한
노동자 투쟁들

5, 10, 11, 12면

※ 웹사이트에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김승주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발생한 원료 공장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특히 높았다. 같은 공장, 같은 설비에서 2006년과 2010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유다.

게다가 이번 감독은 대체로 컨베이어 벨트에 한정됐다. 그중에서도 안전 덮개(방호울)나 비상 정지 장치 중 하나인 풀코드 스위치에 초점을 맞췄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김한성 부지회장은 “노조 측이 따라다니면서 그 외 시설물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벌금 내면 그만

4월 24일에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지지난해 ‘청산 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를 기준치 3배 이상 배출하고도 은폐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시안화수소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다는 맹독성 가스다.

‘청산 가스’ 배출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안화가스 외에도 아황산가스 등 법적 기준치를 넘겨 배출하는 독성 물질이 많아요. 하지만 회사는 그냥 벌금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현대제철은 2016년부터 매년 2만 톤 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량 포함돼 있다. 2014년에 고장난 저감 장치를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한겨레〉, 4월 29일자 보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법정 허용

치를 초과한 건수는 해마다 4000건에서 많게는 1만 4000건을 넘나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 34조에 따르면 이것은 지자체가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충남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5~2018년 동안 징수한 부과금은 15억 원에 그쳤다.

이번 ‘청산 가스’ 배출 신고 의무 위반으로 낸 과태료는 60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적발된 2401건 위반 중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것은 고작 36건이고, 과태료는 1억 4000만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1억 원은 하청업체들이 나눠 내고 원청인 현대제철은 나머지만 부담한다.

이런 일은 술하게 반복돼 왔다. 노동부 감독 때마다 온갖 위협과 경악할 만한 노동조건이 드러났지만 그결로 끝이었다. 큰 사고가 나도 처벌은 대체로 일부 (특히 하청업체) 직원에 한정됐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쥐꼬리였다.

이런 봐주기 덕분에 끔찍한 사망 행



2007년 이후 36명이 산재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당진 공장 정문

렬이 반복됐던 것이다.

최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령 후퇴로 더욱 허름한 누더기가 된 것은, 정부가 ‘살인 기업’ 봐주기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산재 줄이기를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기준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명이 늘어 1588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중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2월 20일 사고 현장의 부분적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 안전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철저한 친기업적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죽음의 공장을 방치하지 말라. 이윤 벌이를 위해 치명적 독성 물질을 내뿜고도 쉬쉬하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현대제철 등 기업들을 처벌하라.

피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김승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제외, 저것도 제외

우선,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한번 더 좁혔다.

이미 개정 산안법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외주화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간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포함해, 중대 산업재해는 압도적으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의 사고성 재해인데 이런 것들은 외주화 금지 “위험 작업” 규정에서 다 빠졌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위험 물질 취급 작업”마저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축소시켰다. 게다가 기업주가 해당 물질을 제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외주화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것의 적용 대상 또한 이것 저것 ‘제외’ 투성이다.

▲ 원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시

행령이 규정한 “위험 장소”는 22곳에 불과, 방문 서비스 노동(에어컨 수리 등)·건물 외벽 페인트칠·청소 등은 제외

▲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덤프·굴삭기·이동식 크레인 등 사고 다발 기계들 제외하고 4개에만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는 관련 직종 50개 중 9개에만 적용, 화물 운송, 방송 제작 관련 노동은 제외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는 모호한 규정인데, 서비스직이 여기에 해당 가능) 제외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겠다고 신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했다.

사고 발생 후 발동되는 작업중지는 추가적 위험을 막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4일 만에 하라는 것은 사측이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개정 산안법은 국민 우롱”

이번 시행령 후퇴는 개정 산안법조차 마땅치 않아하는 기업주들을 의식한 것이다. 여전히 경총은 이번 시행령이 충분히 후퇴하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며 떠들썩하게 생색내며 문제가 해결된 양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여론의 시선을 돌린 후 결국엔 이런 식



4월 17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 후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며 행진하는 노동자들

으로 누더기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한 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겠다”(문재인),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확보됐다”고 해야 작업을 재개하겠다”(노동부 지침)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4월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동 결의대회”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

니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요? ... 사망 사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운전 설비, 컨베이어 벨트, 조선포, 건설업 등을 집중 관리해야 안전 사고 줄이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된 산안법은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이라 국민을 우

롱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사람답게 살려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안법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해에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무려 2400여 명에 달한다. 하루에 6명 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먼저 살리려는 것은 진짜 죽어나가는 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돈벌이가 줄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기업주들이다.

노동개악 반대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산안법 시행령 개악에 대한 항의와 함께, 당면한 노동개악에도 맞서야 한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과로사 합법화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개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험·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

한 해 5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나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미룰 이유가 없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 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신문(노동자연대)이나 다른 수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는 한 달 전인 4월 2일 프랑스 외교관 출신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한 다음 말들이다.

“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탄력]을 더 잃었다. 탄력을 더 잃었다. 세계 경제의 70퍼센트가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1년 전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6개월 전에는 수평선에 구름이 끼었지만, 지금은 날씨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라가르드는 석 달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이 확실히 커졌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1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0.3퍼센트)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경제 전망은 무엇을 예고할까? 크게 아래 다섯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다.

- (1)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심화
- (2) 지배계급의 내분 심화
- (3)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 강화
- (4) 계급 양극화(= 사회 양극화)
- (5) 정치적 양극화

1.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심화

미·북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듯하다. 이런 상황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을 아울러 총칭하는 용어)의 갈등 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국무위원장(최고위 통치자) 김정은이 최근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의 재기는 이미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던)의 전쟁에서 드러난 바 있다.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시작된 1930년대 대불황은 1934~36년 얼마 안 되는 ‘회복’을 겪는 듯하더니 1937~38년 다시 공황을 맞았다. 결국 대불황은 제2차세계대전을 치르고야 비로소 극복됐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 그것도 제2차세계대전 같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성 자체는 평화 정착을 향하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점점 심화되는 쪽을 향할 것 같다.

2. 지배계급의 내분 심화

‘성추행 대(對) 저혈당’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의 최측근이었고 지



경제 성장 둔화는 지배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금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고문인 박지원의 말을 인용하면 될 것 같다. “한국 정치는 개판이다.”

말하자면, 지배자들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마르크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자본가들은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다.” 노동자 착취·공격 면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인 자본가들이 자기네끼리는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서로 싸울 땐 노동계급이 반격을 하기에 좋을 때다.(이에 대해서는 이번 호 김문성 기자의 글,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국회 격돌[5면]을 보라.)

그러나 만일 노동계급이 지배자들 중 한 부분을 응원하며 안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바로 그 지배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공격 당하는 일을 겪을 것이다.

물론 때로는 노동계급이 불가피하게 차악(次惡: 최악보다는 덜 나쁨)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정치적 독립성, 특히 비판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입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총돌에서 우리는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정의당이 포함된 편을 편들어야 한다. 단순한 이진투구(진흙탕 속 개 싸움)로 일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 등 주류 정당들에 대한 어떤 착각과 환상도 금물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3.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 강화

경제가 나빠지면 지배계급의 노동계급 공격이 강화된다. (이하 생략 — 이 문제는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의 기사이벤 호 6~7, 8면]가 설명할 것이다.)

4. 계급 양극화(= 사회 양극화 = 빈부격차 = 사회 불평등)

경제가 나빠지면 계급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자본주의는 호황 때조차도 계급 양극화를 낳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급이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가만 있다면 호황기에조차 노동계급은 상대적 빈부격차를 겪는 것이다. 하물며 불황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계급 양극화의 핵심은 빈곤과 빈곤층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 불안이 증대한다. 사회 질서가 불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런 때는 사회 성원 모두가 막연한 계라도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위험한 고비가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더욱 갈구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의미에서 대안은 크게 궁극적 대안과 당면한 대안으로 구분된다. 궁극적 대안은 자본주의 국가를 해체시키고 노동계급 국가가 세워지면 해야 할 과제들을 말한다.

사회주의자는 궁극적인 대안뿐 아니라 당면한 대안도 내놓아야 것이다. 가령 우리는 대우조선 민영화(사영화)의 당면 대안으로 국유화(영구 공기업

화)와 노동자 직장 점거를 주장한다. 후자는 혹시 모를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의 대안으로서 노동자 통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5. 정치적 양극화

경제가 나빠지면 나타나는 다섯 번째 양상은 바로 위에서 말한 사회적 양극화, 즉 계급 양극화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정치도 양극화한다는 것이다. 새 운동이 떠오르고 옛 괴물이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노동운동과 함께, 자본주의 장기 침체상황이므로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다른 사회집단들도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원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정의당이 집권해 실망을 안겨주면 민중당이 정의당의 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개의 진보정당 가운데 하나에다 표를 몰아 주자는 분위기가 더 유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계급 정당들을 패퇴시켜야 하는데 표가 분산되면 안 좋으니 한 정당에 다 몰아 주자는 생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후보가 이기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좌파 측의 많은 사람들이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의 승리를 민주당의 승리로 보고 있다. 오로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덕분에 정의당이 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 4월 3일 치에 따르면, 정의당 선보 관계자는 이

렇게 말했다.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진보 진영 표가 느슨하게 이완하면서 자칫 위험할 뻔했다.”

물론 이는 정의당이 앞으로는 민주당과 단일화하려 애쓰지 말고 민중당과 단일화하려 애써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정치 양극화가 트럼프 대(對) 미국민주사회당 DSA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파시즘과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반면, 가령 영국 같은 경우 제러미 코빈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과 함께, “멸종 반란”이라는 급진적 기후 변화 반대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알제리와 수단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거대한 민중 항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는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아래로부터 권력을 잡아 미해결의 민주주의적 숙제들도 함께 해결하는 연속혁명(連속革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체제의 반혁명이 반격을 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맺으며

한국처럼 신흥국의 유산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나라에서 투쟁에 참가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막연히 우호적이지만, 자신의 실천과는 별개로 여긴다. 그들은 이론을 그저 체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원리로만 보지, 행동을 위한 길잡이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은 아무리 좌파적 또는 급진적이어도 개혁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발전할 수 없다.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합 조직들을 분열시킬 첨예한 쟁점이나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좌파 조합원들의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그리고 교찾사가 이끌던 시절의 전교조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계급정치가 아니라 노동조합주의에 불과했다.

이처럼,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합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치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번번이 개혁주의 정당에게 기선을 빼앗긴다.

결국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이 없으면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은 개혁주의자들의 민중주의 전략(계급정치를 흐려 버리는)에 도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체제의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면 노동자 투쟁은 피할 수 없이 정치적 성격을 점점 더 띠게 된다. 투쟁이 급속히 고양되지 않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안에서 우경화 압력이 생겨난다.(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 방어를 방기한 다양한 노동조합 조직들을 상기하라.)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투쟁을 이끌려 애쓰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체제가 끊임없이 던지는 첨예하고 커다란 정치 문제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이정원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상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41만 6000명으로 집계했으나 24만 명 이상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외돼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7만 5000여 명이다. 그조차 실제 전환을 완료한 수는 13만 3500여 명에 불과하다. 전체 중 32퍼센트만이 실제 전환된 것이다.(2018년 12월 말 기준)

정부가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한 ‘생명안전업무’조차 전환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고(故) 김용균 동지가 사망한 발전소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철도 비정규직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이 합의됐는데도 전환은 ‘1도 안 됐다’.

정부는 전환 제외 노동자들에게는 차별 완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일말의 방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중 일부는 고용 안정과 조건 개선을 위해 계속 투쟁을 벌여 왔다. 경기 지역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투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어렵사리 고용을 지켜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향후 비정규직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전환 제외된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는 효과를 낸다. 왜냐하면 전환제외자들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채용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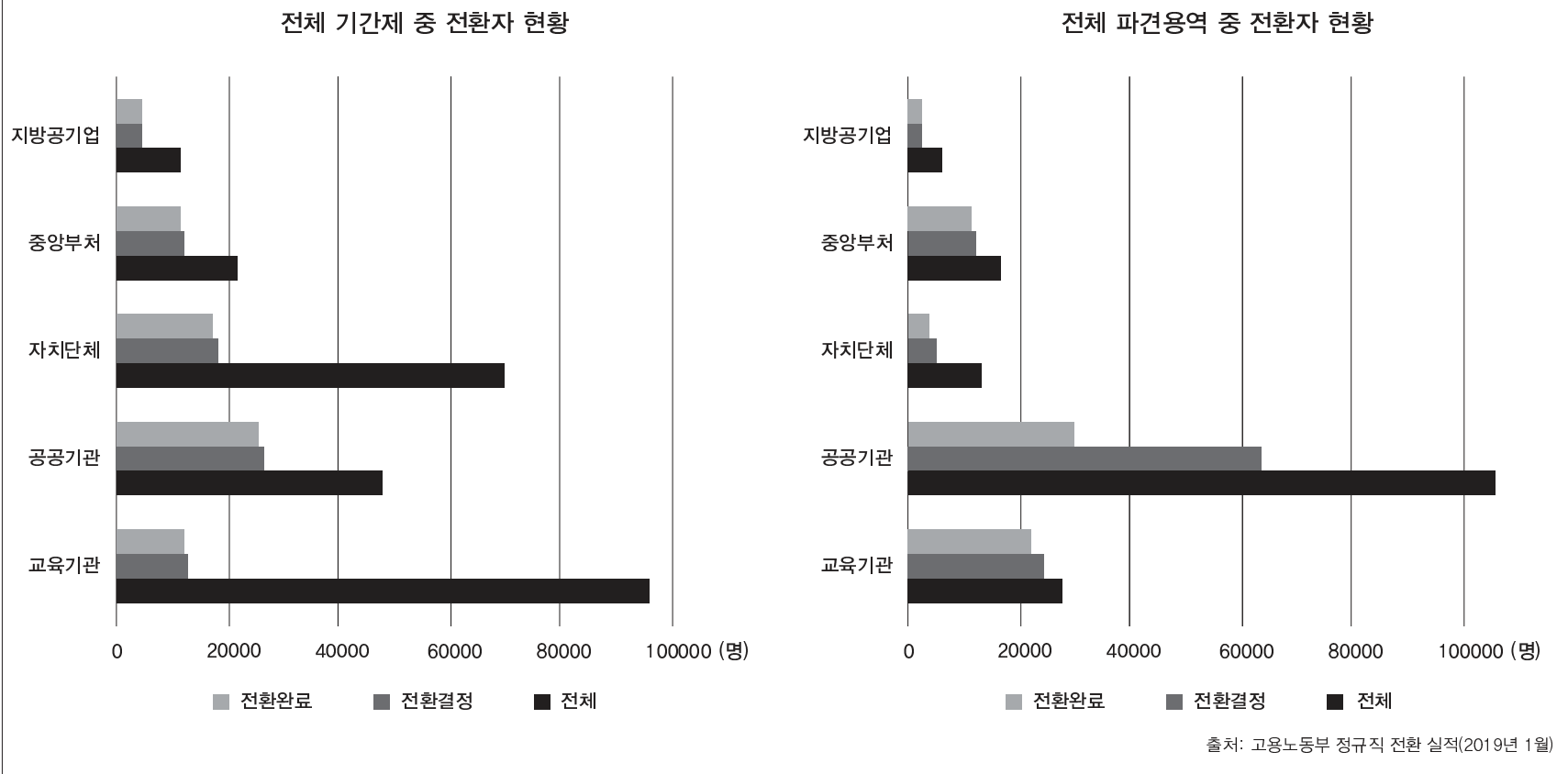
게다가 정부의 황당한 분류법 때문에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3단계 전환(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이것도 물거품이 되고 있다.

오리발

둘째, 정부는 ‘선 고용안정 후 처우개선’이라며 단계적 추진을 말했는데, 이것은 사기였다.

전환자 중 절반은 무기계약직, 나머지 절반은 자회사로 전환됐는데, 약속한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는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낮은 처우를 적용했다. 전환된 노동자 상당수가 직무급제 때문에 앞으로 기존 무기계약직 노동자 수준의 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수원시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임금 총액이 적게는 350만 원에서 많게는 1050만 원이 적다.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반에서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추



세다. 저임금 고착화와 차별을 강화한 직무급제 폐기 목소리도 높고 있다.

자회사 문제도 심각하다.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정부의 ‘비호’ 속에서 온갖 비열한 꼼수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자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철도공사 청소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전환된 후,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임금도 삭감해 용역 시절보다 임금이 줄게 생겼다. 마사회, 가스공사, 국립대병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전콜센터, 도로공사 등에서 사용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맞서고 있고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5월 하순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전환된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보다 약간 더 받는 노동자들이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이 임금 인상 효과를 대폭 줄였다.

‘공정채용’ 내세워 고용 불안으로 내몰아

셋째, 정부는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정규직화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 집계로도 17만8000 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는데, 정부는 민간위탁에 대해 각 기관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사실상 민간위탁을 유지해도 좋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다.

그간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라며 시간만 끌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를 보고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도 정부 발표만 손꼽아 기다리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돼 배신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민자 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와 모순되는 민간위탁 정규직화를 아예 포기해



저임금 고착화하는 “이중 차별 직무급제” 폐기하라

버린 것이다.

넷째, 고용승계가 아닌 경쟁채용을 늘려 되레 고용불안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정부 통계로도 전환 완료 인원 중 15.7퍼센트가 경쟁채용을 거쳤다. 공공기관에서는 무려 3명 중 한 명 꼴로 경쟁채용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하반기 보수 야당들이 앞장서 정규직화가 ‘채용비리’인양 몰아갔는데 정부가 이런 흐름에 편승해 ‘공정채용’을 강조하면서 경쟁채용 추세가 강화됐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는 사측이 합의를 파기해 무려 2000명의 자회사 전환 채용이 불확실하게 됐고, 일부는 해고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 목소리를 낼 노조조차 없는 비정규직들은 항의도 제대로 못 해 보고 일터를 떠나야 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진 것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민간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지난해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렸다.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래로 비정규직 수는 매년 늘어왔다.

문재인인의 정규직화 정책이 이렇게 누더기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이 생색내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정규직화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정규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다.

게다가 정부가 노골적으로 우경화하면서 정규직화는 더 빈껍데기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기대를 품고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기대가 깨져 나가면서 투쟁에 나섰다. 점점 그 규모는 커져 왔다. 새로운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에 가세하며 노동운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만하면 성공’이라며 정규직화에서 손을 털고 싶어 하지만, 노동자 투쟁은 정부의 기만을 폭로하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확산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연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연대 투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이나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이 준비되는 상황이 이를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며 정부 정책

을 바꾸려면 단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낀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에 대해서도 갈증이 크다.

적지 않은 사업장들에서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정규직 노조들은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식을 추수해 비정규직 편에서 지 않고 침묵하거나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일들도 벌어졌다. 이렇게 내용을 겪고 비정규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곳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노조가 약해지고 심각한 위기를 겪는 일들도 있다.

정부와 사측이 아니라 노동자끼리 불신과 원망을 키우면 단결이 약해지고 노조 자체가 약해지기 십상이다. 협소한 부문주의나 당장 발등의 불을 피하려는 근시안적인 대응으로는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없다. 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연대 건설에 적극 나서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조건을 공격하는 지금 함께 단결해 싸워야 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김문성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벌이면서 가로막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직후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다. 여당에 협조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로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자한당은 법안 상정을 막지 못하자 4월 27일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공식 정치 내 충돌이 격화한 것은 두 쟁점에서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기류가 바뀌는 듯한 상황에서 지배계급 정당들도 서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좌익이니 독재 잔당이니 하는 과장스런 표현으로 서로 공방하는 배경이다.

공식 정치의 분열상은 경제·사회 양극화에서 비롯한 정치 양극화가 공식 정치의 장으로 옮겨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치 양극화가 “민주당 대 자한당”으로 비치는 것은 사회적(계급적) 양극화의 왜곡된 반영이다. 우파는 공식 정치 영역에서 별 가감없이 대표되지만, 노동계급은 턱없이 과소 대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왼쪽 축(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2년 동안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

우파는 결집하지만, 노동계약을 추진하는 민주당으로 노동계급이 결집

할 수도 없고, 결집될 리도 없다. 우파의 결집과 회복이 실제보다도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이다.

사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노동자들이 선거제 개혁으로 공식 정치의 장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강화되길 바라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 문제 등을 놓고 공식 정치의 장에서 정의당이 반(反)우파 공조에 함께하고, 민중당이 장외에서 이 공조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기지개를 펴는 노동자 투쟁이 더 활성화돼 왼쪽 축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층의 노동자들은 문제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쓴 입맛을 다시며 스스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는만큼, 상황은 나쁘지 않다. 노동계약 입법 일정이 잠시 밀린 것도 그 부수적 효과다.(그러나 계약 강행 위험은 계속 경계해야 한다.)

이런 투쟁들을 지지해 성과를 쌓아가며 정치화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객관적 위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독자적이고 급진적 대안 제시가 갈수록 필요해지고 있다.

성에 안 차지만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한당이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촛불 이후 달라진 세력균형 속에서는 현행보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선거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례성이 강화되면 특정 지역주의보다는 전국에서 고루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는 노동계 진보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물론 현재의 선거제 개혁안은 애초에 진보·좌파 진영이 요구한 100퍼센트 연동형 비례제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안이다. 비례 의석 배정 자격에 대한 봉쇄 조항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이 선거제에 기초한 여러 가상 예측들에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 의석이 꽤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만큼 지금의 선거제도가 노동계 진보 정당들에게 불리했다는 얘기다.

우파에게는 자신들의 의석이 주는 것과 진보·좌파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 둘 다 못 봐줄 일임이 분명하다.

또한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도 불편하다. 현재 4당이 합의한 법안은 공수처가 기본으로 수사권만 갖기로 했지만, 검찰과 경찰, 법원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다. 이것은 검찰을 견제할 권력기관이 검찰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다.

사실 수사권을 갖춘 권력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꼭 서민층에게 좋은 일만도 아니다. 또, 공수처 같은 기관 설립으로 부패를 막을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자 부패 원조당으로서 자한당은 검찰 권력의 혜택을 주로 받아 왔다. 자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KT 채용 비리 건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가 되지 않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못 들어 주겠네 5·18 망언자를 비호하고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독재 정권 후신들이 “독재 타도” 운운하는 건 역겨운 일이다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강철구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참아야 했다. 관리자들은 배차를 유리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심지어 성접대까지 강요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화물연대에 가입해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화물연대에서 탈퇴하고, 앞으로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약약서를 강요했다.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투쟁에 나섰다. 그러자 사측은 3월 31일부로 조합원들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사측은 4월 5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다른 물류창고로 이동했다.

노동자들은 평택에 이어 용인 물류창고 앞에서 농성을 하고 몸에 쇠사슬을 묶고 결사 저항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4월 19~20일 이틀간 전국의 화물연대 확대간부 700여 명이 모여 연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자 언론에 많이 보도되며 사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연대도 확산됐다. 전농경기도연맹이 지지 성명서를 냈고, 전국협동조합노조도 농협중앙회를 규탄하고 화물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보권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조합원은 “농민단체인 전농과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지지하니까 사측이 많은 압력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에 파업을 통해 화물연대를 인정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한 농협물류 평택센터 노동자들의 연대도 중요했다. 농식품 물류센터인 안성센터와 공산품 물류센터인 평택센터는 농협물류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현장에서 투쟁과 연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일이 많아지면 법을 바꾸는 것도 쉬워진다

결국 농협물류는 4월 26일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편파적인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아냈던 배차 문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3월에 합의한 5퍼센트 임금 인상과 장거리 수당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괄 복직이 아니라 3개월 동안 15명씩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한 점에 아쉬워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이번 화물연대 농협안성물류센터분회 투쟁은 사회적으로 특수고용 노동

자의 노동기본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됐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현장에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선다면 폭넓은 지지와 연대 속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투쟁들이 서로 연결된다면 정부와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압박하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화물연대 안성물류센터분회 노동자들의 승리가 값진 이유다.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운영위원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제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썰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동갈등'에서 잘 드러난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이 중 일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합의나 공익위원인 형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매우 크다. 4월 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다시 올라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가 대중 정서를 의식한 집행부가 경사노위 참여 제추진을 스스로 포기한 실거은 게임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임시

대의원대회 이를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파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현장발의안 제출 여부를 심사숙고했다. 그 며칠 전에는 사실상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는 (경사노위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위원들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른 한편, 좌파공조 운동(경사노위 참여 반대 캠페인은 임시대의원대회 몇 주 전부터 공동성명을 발표해 경사노위 참여파 논리를 반박했고, 대회 나흘 전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만약 임시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됐다면 좌파들은 두 달 전보다 큰 차이로 승리했을 것이다. 좌파들이 경고한 경사노위의 구실이 1월 대의원대회 이후(특히 탄력근로제 개악 과정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김명환 집행부의 기대(노사정위와 다르다거나 의결구조가 공정하다는 등의 기대)는 헛된 것임이 드러났다. 좌파공조 운동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2차전을 할 태세가 돼 있었다. 그래서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난 1월 좌파공조 운동이 올랐고 승리했음을 확인해 준 대회였다고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일각에는 이런 점들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뒤늦게나마 앞장서 투쟁에 나섰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좌파공조 운동이 벌인 경사노위 참여 반대 캠페인의 효과를 보여넘기려 애쓰는 반면,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해 온 김명환 집행부를 오히려 사주고 있다. (“뒤늦게나마”라는 부사어를 통해, 아쉬운 대로 접어주는 마음을 표현했어도 말이다.)

단순히 인상에 불과한 이런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과 투쟁 증대, 좌파공조 운동의 효과적 대응 등 때문에 김명환 집행부를 포함한 경사노위 참여파들의 처지가 시간이 갈수록 곤색해졌음을 보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4월 1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또다시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

5월에도 노동개악 추진과 이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것

다른 한편, 노동자 저항의 양상은 기존에서 크고 작은 노동자 투쟁(항의뿐 아니라 때때로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관망하다가 이제 스스로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여전히 일말의 기대를 가지면서도).

이런 노동자들 가운데는 새로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과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기대감과 함께 자신감을 얻어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 교섭과 이면저전 항의의 하다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처지가 나아지기를 기대했다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도리어 후퇴한 것에 불만을 갖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나, 문제인의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꺾다 뺏기’ 신공으로 더 고통스러워진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호나이스 수리노동자, KT 하청업체 노동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노동자, CCTV 관제사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이 위에 언급된 두 부류 노동자들의 사례다.

지난 4월 13일 특수고용노동자 집회에 건설 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모인 것은 기층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였다. 그 집회에 참가한 한 건설노조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를 조직하면서 “노동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와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투쟁에 나선 것도 기층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직접고용 정취를 바라는 공공병원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열원 때문에 상이한 상급 노조/연맹들이 연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공공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21일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 의료연대본부 지부장은 “기층 분위기가 몇 년 전과 달라졌고 오랜만에 밝고 신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투쟁하는 부문이다. 이들은 7월 초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두드러지게 늘었다.

그동안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화학·섬유·식품 부문 노동자들과 IT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일부 사업장에서도 직접고용 정취를 바라는 공공병원 비



4월 20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의 공동 투쟁 집회. 세 노조의 공동 투쟁은 기층의 분위기 고扬을 보여 준다

정의당 후보의 창원성산 보선 승리

최근 재보선에서 정의당이 승리한 것도 이런 계급 세력균형의 변화를 보여 준 것이다. 또,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제주 영리병원 취소도 노동자와 여성 운동의 힘이 강화됐음을 보여 준다.

민주당의 배신으로 비록 공식 정치 영역에서는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더 보고 있지만, 창원 보선은 민주당 왼쪽의 지지 증가도 확인해 준다. 만약 창원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했다면 참패했을 것이다. 노화한 전 의원을 지지했던 창원성산 노동자들은 국가기구 운영권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과 진보야당의 차이, 정의당과 민주당의 계급 기반의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물론 개념·원리를 통해 안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실천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런 정치적 차이를 간파하고 일각에서 정의당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여권연대”라고 말하는



계급 세력균형 변화를 보여 주는 정의당의 승리

것은 부정확하고 초파라적인 태도이다. 선거연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승리를 뺏아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정의당에 투표한 그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이런 자세는 새로 운동 속으로 이끌어 들어와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 훨씬 광범한 노동자들과 연관 뺏기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야 할 때

자칫 공식 정치 영역만 쳐다보면 우파의 부상만이 크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지배계급은 분열해 있고, 노동운동은 만만찮은 활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당과 민주당의 갈등을 지배계급 내의 분열로 보지 않고, 보수 대 '진보', 또는 적폐 세력 대 '민주주의' 세력, 우파 대 '좌파'의 분열로 본다. 그러면서 기가 살아나고 있는 우파에 맞서 진보·민주주의 진영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운동 안에도 이런 생각이 적잖이 퍼져 있다.

그러나 우파의 회색을 막아야 한다는 부정확하고 초파라적인 태도이다. 선거연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승리를 뺏아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정의당에 투표한 그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이런 자세는 새로 운동 속으로 이끌어 들어와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 훨씬 광범한 노동자들과 연관 뺏기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우파의 기를 살려 준 것

좌파 노조활동가들은 사업장 안팎으로 움직여야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제인의 배신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지금 당혹해 하면서도, 개혁을 스스로 얻으려고 투쟁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좌파 노조활동가들은 자기가 속한 사업장이나 부문의 협소한 관심사에 머물러선 안 되고, 노동계급 전체와 기존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군부, 지방자치단체, 복지국가 등을 아우르는 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활동해야 한다.

특히, 새로 조직된 노동자층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령 자기가 속한 연맹에서 새로 조직된 부문이 투쟁에 나선다면 그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려고 애써야 한다. 또, 자기 사업장이 다소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와 동일시하지 말고(그러면 자기 저하되기 십상이다),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연맹의 활동적 노동자층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좌파 활동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들춰 내고 이



2월 20일 현대중공업과 울산 부산의 좌파 활동가들이 대우조선 앞에서 가판을 진행했다

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은 강조점을 약간 바뀌, 개혁을 위해 스스로 싸우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깨닫고 이런 활동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좌파는 중요한 투쟁에 관여해 성과를 낼 기회를 놓칠 것이다.

개혁주의 부상에 대처하기

노동운동이 성장하면 개혁주의도 성장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개혁주의는 단지 개혁주의 정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운동 지도층과 개혁주의 정치 좌파 모두를 뜻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고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지금보다 더 정치당의 부상과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좌파 활동가들은 투쟁적이면서도 개혁주의적인 ‘모순된 의식’(그람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실 상황을 ‘타협적 지도자’ 대(對) ‘비타협적 현장노동자’ 식으로 일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많은 노동자들은 지금 스스로 투쟁에 나서면서도 여전히 회사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종종 주저하거나 국회사 정치권과의 협상(또는 이를 전담하는 개혁주의 정당)에 의존

하는 등 개혁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좌파 활동가들은 개혁을 위해 스스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현실 투쟁과 반자본주의의 좌파 정치를 서로 연결시켜, 온건 중도파 활동가들보다 더 효과적인 전술을 제시하려 노력해야 한다. 좌파는 혁명적 노동운동의 역사적·국제적 경험에서 배움으로써(특히,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를 통해) 이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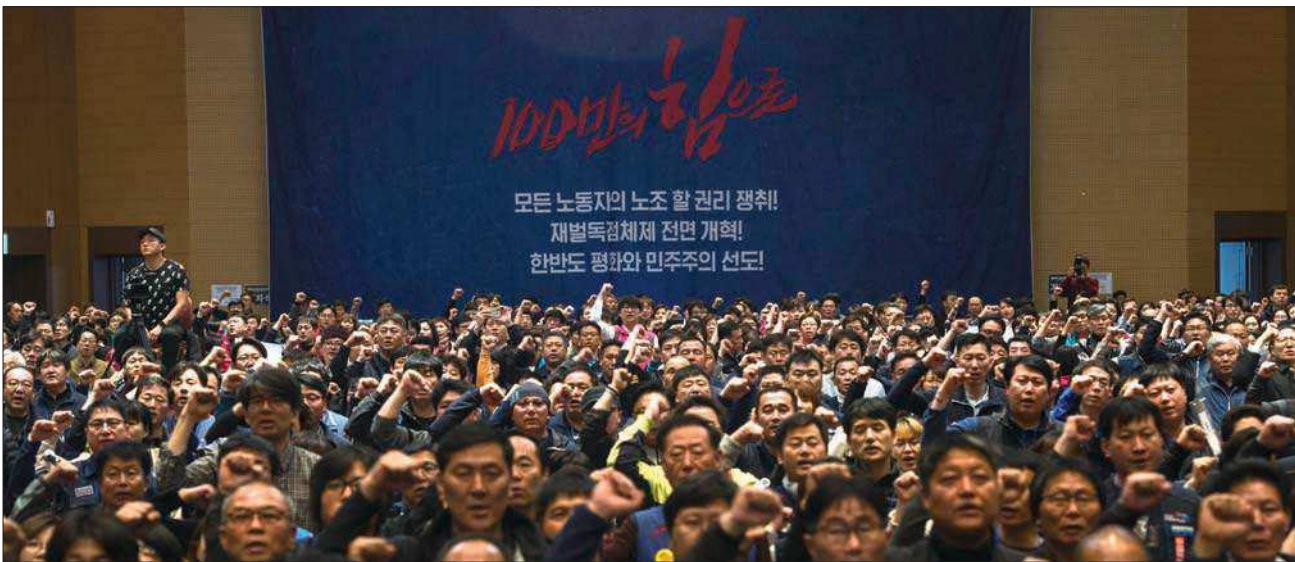
경험에서 배우기: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

종파는 자신이 모름지기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계급에 가르쳐야 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가르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잘못 가르쳤을 때, 이런 가정은 자신의 무능이나 오류를 가리키고 숨기기 위해 나쁜 수단들(특히, 남 탓하기나 비방, 헐뜯음 등)을 발전시키게 만든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배우는 자세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자기 한계를 알며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배우려 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급에게서 배워야 한다. 아레와 같은 정답을 통해 마르크스는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했다. “환경 변화시키거나 양육에 관

한 유물론적[포이어바흐 류의 기계적 유물론을 가리킴] 원칙은 환경이 사람들에게 의해 변하고 교육자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유물론적) 원칙은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뉘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본다.”(마르크스의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들’ 중 셋째 테제) 지금까지 보았듯이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은 맥락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세한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묘사하는 데 그친 채 그것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해서 설명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추세가 발전하고 있거나 심지어 국면이 바뀌어도 깨닫지 못하

기도 한다. 가령 어떤 공장에서 매일 2시간 부분파업을 한다고 치자. 주 문량이 밀려 있어 사측이 애가 타는 공장에서 벌어진 2시간 부분파업과 물량이 줄어 그릴잡아도 하루 2시간 조업단축을 하려면 공장에서 벌어진 2시간 부분파업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다. 또, 투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올리는 추세 속에서 돌입하는 2시간 파업과 조직력이 강한 노조가 형식적으로 하는 2시간 파업이 같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맥락을 고려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좌파 노조활동가들과 좌파 정치단체가 서로 접촉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워야 한다.



경사노위 참가가 거부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문재인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물려받았다고 징징대지만, 사실은 해결책도 물려받고 있다. 노동 개악과 노조 할 권리 공격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등에 올라 타서 집권하려고 미사여구와 개혁 공약을 남발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그것들을 내던졌다. 취임 1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고, 2년이 되기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3단계 민간위탁)도 중단했다.

대신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 악화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기업 투자 지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금보다 이윤과 투자를 빠르게 증가시키겠다는 뜻이다.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올해 경제 상황은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점점 성마르고 뻔뻔스럽게 임금 억제를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초 국회연설에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면서 나온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을 노린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공정성”은 말뿐이다. 정부는 마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을 내던지지 않았다면 이 말이 그럴 듯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진짜 이유는 기업의 이윤 회복을 위해서다.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 노동비용 감소를 무엇보다 바란다. ‘광주형 일자리’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모델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임금 삭감이다. 박명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한국 완성차 시장은 지금의 임금구조로는 투자 매력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영표는 더 나아가, 경기변동 상황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쉬운 해고를 주장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되 실업급여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모델 국가를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바꿨을 뿐,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임금 억제와 쉬운 해고를 만만찮게 추진하려면, 노동조합의 저항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던 문재인이 ‘사용자 대항권’을 포함하는 개약을 추진하는 이유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ILO 비준 관련 내용뿐 아니라 사용자 측 요구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은 한국당을 설득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도리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2만여 명이 모인 4월 13일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결집대회'

재인 정부가 그렇게 끌려가는 입장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쟁의 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정성 제고, 대체근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파업에 큰 제약을 가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요구 중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명성 제고는 합의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방향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 4월 15일, 사용자 측 요구가 반영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을 권고했다. 이 조처는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제약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이미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사용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쟁의를 해마다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으로까지 연장이 권고된 것이다. 이것은 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를 이른바 교섭 비용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다.

*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이미 노동법에 ‘생산시설 점거 파업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관련 제약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생산시설이 아닌 곳의 출입도 금지되고, 연대 세력의 출입을 포함해 사업장 내 활동이 일절 금지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들이 직장 점거, 또는 자칫 점거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직장 내 파업 활동, 조업 방해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점거 파업이 직장 이탈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그렇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나 생산시설 점거 파업 금지는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폐기하기는 커녕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나 대체근로 확대 등 더한층의 후퇴도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은 탄압받지 않고 파업하기를 하늘의 별따기로만 들려 한다.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파업)을 제약해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처들이 도입되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법에 위배되는 파업을 하지 않도록 조합원을 설득하고픈 유혹이 커질 것이다. 자칫 노조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행동을 하기보다 협상에 의존하도록 말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기 십상이고, 길들일 필요가 사라진 노조는 대화 테이블에서도 무시당할 것이다.

임금 억제, 쉬운 해고 추진과 파업권 공격은 서로 연결돼 있다. 노동조건을 공격하려고 노조 활동과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임금 방어,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노동조합 좌파 활동가들은 이



문재인 정부는 임금 억제와 쉬운 해고를 위해 노동조합의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

런 투쟁을 서로 연결시키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아무리 마비됐어도 노동개약이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다른 쟁점(페스트트랙 같은)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노동개약을 위해서는 의기투합할 수 있다. 게다가 우파의 기가 살수록 노동개약도 더 오른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약 일정이 물 건너갔다고 한숨을 돌려서는 안 된다. 지배계급의 분열을 이용해서 더 강력하고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제재 공식 발효 — 간섭 중단하라
- ★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 ★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 ★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부를 것
- ★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 ★ [인터뷰] 진경균 삼성화재에너지지부 지부장 “사고조사원 처지는 너무 열악합니다”
- ★ [인터뷰] 최순미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선언 운동 나서다
- ★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탄압 중단하라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조건 개선돼야

한 아이돌봄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봄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결국 돈 들어가는 대책들은 빠져, 정부의 공공서비스 투자 책임은 방기한 것이다. 여가부의 대책 발표 직전인 4월 25일 오후, 현직 아이돌봄 노동자이자 서울에서 노조를 주도적으로 결성한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배민주 사무국장**(사진)을 만났다.

“전국의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이번 학대 사건을 접하고 놀랐어요. 그간 대부분의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일해 왔어요. ‘아이 불래? 밥일 할래? 물으면 차라리 밥일 한다’는 옛말도 있듯이 아이 돌보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 많은 보수만 바라면 이 일을 못 해요. 저희는 최저임금 수준만 받으며 일해요. 게다가 일할수록 퇴레 처우가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교통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여전히 주휴·연차수당도 못 받는 사람이 40퍼센트나 돼요. 임금의 10퍼센트를 주던 경력수당도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 버렸어요. 어떻게 신입사원과 10년 넘은 선생님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성 인정과 체불 임금 보전을 위해 소송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월례회의가 없어졌어요. 이게 사라지다 보니 선생님들끼리 사례를 공유하고, 어떤 게 아동학대이고 이런 일을 줄이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얘기할 곳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소속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노조 가입이 확산되면 큰일이고 근로자성 소송에서 지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우리 소속감을 없애고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CCTV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배민주 사무국장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능사가 아님을 조목

조목 짚었다.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어요. 그간 CCTV가 있어도 아동학대는 벌어졌어요. 예방은 안되는 거예요. 만약 기자님이 근무하는 10시간 동안 상사가 지켜보고 있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희는 식사하는 것까지 다 노출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용자들께 이렇게 말씀 드려요. ‘아이가 3살이면 저도 3살처럼 놀아줘야 하는데, 누군가가 제 행동을 보고 있으면 행동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원하신다면 달고, 그렇지 않으면 밍고 말겨 달라고요. 그 뒤 아이의 반응이 답이에요. 아이가 ‘선생님’ 하고 달려오며 제 목을 끌어안아요. 학대를 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CCTV가 필요 없게 돼요. 이용자와 아이들, 저희가 신뢰를 쌓아가는 걸 방해해선 안 돼요.

불안한 이용자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다면 아이와 노는 공간에 국한해 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공간까지 다 허용하면 선생님이 숨쉴 공간이 없어요.”

배 사무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여가부는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성 인정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말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박원순의 서울시도 종일제 돌봄 노동자에게 주는 지원금(시비)을 없앴다고 한다.

“제가 노조를 찾아가기 전에 처우가 점점 안 좋아져서 혼자 여가부, 서울시, [제가 있는] 강서구 등을 찾아갔어



요. 하지만 여가부의 어처구니 없는 답만 돌아왔어요. ‘이 사업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지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용돈벌이로 하라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지난해 여름 노조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들 다 초청해 국회 토론회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노조가 있으니
말할 곳이 생겼어요”

배민주 사무국장은 노조를 결성하며 느낀 조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가 지난해 혼자서 한 달 넘게 애기해 봤지만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말할 곳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 ‘우리도 노조가 있대’ 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전국에서 서울·경기의 선생님 수가 가장 많아요. 담당 부처인 여가부도 서울에 있고요. 그런데 정작 서울·경기에는 조합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제가 있는 강서구 아이돌봄미 선생님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올렸어요. 그런데 무려 30명이 넘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입이 부르트 가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조직했어요. 선생님들이 일하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으니 밤 12시에도 만났고 몇 명이 모이든지 갔어요. 지금은 서울에만 조합원이 400명이예요.

노조를 발판 삼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개선점을 찾고 협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아이 낳았다고 직장 그만 두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처우가 너무 나빠다 보니 경력 있는 분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파요. 다음 세대에서는 더 좋은 조건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활동합니다.”

인터뷰·정리 최미진

인터뷰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는 아이돌봄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소송이 패소하자 항소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후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공짜 초과근로로 뜯기는 임금 일부를 되찾다

양효영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노동시간을 인정받고, 임금도 인상하는 성과를 냈다.

시설 노동자들은 학교의 전기, 난방, 기계 등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동안 매달 2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209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아 왔다. 매달 약 40시간 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사측이 임금을 떼먹을 수 있었던 것은,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포괄임금제* 였기 때문이다. 이는 3교대, 맞교대가 필수인 시설 노동자들에게 휴일·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사측의 꼼수다.

시설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결의한 후, 학교 당국과 면담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과 하청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 시설 노동자들이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 비해 한동안 투쟁에 전면에서 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 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듯하다.

이런 태도를 보고 노동자들은 학교



정문에 건 현수막 학교 당국은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하면서 정작 시설 노동자는 없는 사람 취급해 왔다

당국에게 파업을 통보했다. 학교 정문에 요구를 알리는 현수막도 기습적으로 걸었다.

그러자 당황한 학교 당국은 서둘러 하청업체에게 사태를 해결하라고 압박을 넣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매달 250시간 노동을 인정받게 됐고(3교대 노동자 기준), 임금이 16만 원가량 인상되는 성과를 냈다.

이대 시설 노동자들은 올해 초 점거 파업으로 승리를 거둔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투쟁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시설 노동자인 남석우 이대분회 조직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무적이게도 시설 조합원들 스스로 서울대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당국과 교섭 때도 ‘서울대 투쟁 못 봤냐며’ 얘기했을 때 학교 측이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는데 말은 많이 아꼈죠. 시설 관리는 파업을 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계, 냉난방, 전기처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 업무가 실제로 마비됩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이처럼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 매연에 고통받던 학내 주차 관리 노동자들도 좀더 쾌적한 업무 공간을 약속받았다.

최근 여러 작업장에서 노동자 투쟁이 만만찮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화여대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높이자 학교 당국은 더 난감했을 것이다.

남석우 이대분회 조직부장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

의한 것이 학교 당국을 물러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들어 준 분위기 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문제로 시작된 투쟁의 여파가 아직도 있고, 최근에 미투 운동이나 낙태죄 폐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저항이 있는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이 나서자 시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괄임금제적 성격을 더 고쳐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시설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돼 있어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이 나오지 않고 야간수당만 지급받고 있다. 이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시설 노동자들과 비교해 차별이기도 하다.

이번 시설 노동자들의 성과는 포괄임금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소중한 첫 걸음이다.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계속되어야 한다.

용어설명

포괄임금제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통치는 것.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가능케 하는 꼼수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를 공약해 놓고는 지키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김은영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 3~4일 이틀 경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를 만든 후 2017년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KTX,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간절히 원한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김승현 조직부장은 “보통 한 달에 철도의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10시간을 더 일”한다고 말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도 정규직과 같은 월 164시간의 노동시간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짜 사용자인 철도공사 사측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모회사가 164시간 일한다고 해서 자회사가 똑같이 일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냐”며 노동자들의 염장을 질렀다. 코레일관광개발 사측도 원청 코레일과 위탁인 건비를 이미 체결했다며 버티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월간 휴일 수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10일로 맞춰야 합니다. 대체인력

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70퍼센트가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 불과해요. 숙박 노동이라도 할라 치면 6시간의 휴양시간 밖에 갖지 못하고 다시 열차를 타야 해요.”(김승현 조직부장)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 수행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다. 노동자들은 숙박 사업 사측, 7일 전에 통보만 하면 연차 가능, 육아휴직 3년 확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공사 사측은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제인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겠다고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공약은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았다.

뻔뻔스럽게도 철도공사는 이 노동자들의 업무가 단지 서비스 업무라며 안전 업무를 못하게 막고 있다.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도 대고 있다. 국회에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철도공사와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정규직과 노동시간 차별 말라 철도공사는 약속한 정규직화도 근무시간 단축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2017년 파업)

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현장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승무원의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원충원과 직접고용 같은 노동조건 개선은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 요구를 외면하는 한 위선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경고파업을 예고하자, 부산고속열차승무지부에서 열차탐장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레일관광개발노조 이윤선 부산지부장은 한 열

차에서 함께 일하는 열차탐장들이 지지해 줘서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지와 연대가 더욱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큰 힘을 받을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 투쟁을 적극 지지하자.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강철구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리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국가인 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입니다. 고용 불안은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신규채용 철폐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하라!”(투쟁 결의문)

역대 정부와 교육청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헌신짝 버리듯 해고해 왔다. 학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채용된 지 4년 또는 8년이 지난 노동자의 채용을 회피했다. 해마다 재계약해야 한다는 조건을 악용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도 제공하지 않았다. 병가는커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출산을 하면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2년 1170명에서 현재는 600여 명으로 절반이나 해고됐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이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에도 조합원 3명이 해고됐다.

연대를 확대하자

4월 25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2019년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를 즉각 중지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강사



10년을 참았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대량해고, 정규직 전환 제외, 단협 제외 등 모진 차별 속에서도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 왔다

도 단체협약 적용하라. 10년을 일했다. 근속수당 지급하라.”

노동자들은 학교 교육공무직이 받는 수당을 차별 없이 동일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악랄하게도 비정규직 교강사들을 단체협약 직종에서 제외시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꼭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교육노동자로서 단체협약 직종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 안정을 간절히 염원한 노동자들

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절망하지 않고 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경기지역 해고 철회 투쟁을 계기로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연대도 확대됐다. 노동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열악한 조건을 알리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 왔다.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이 140명에서 250명으로 늘었다. 노동자들의 힘과 단결이 높아진 결과, 올해부터 월 13만 원 급식비와 연 100만 원 명절상

여금을 받게 됐다. 투쟁의 소중한 성과다. 다른 지역의 성과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 4명이 복직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충남과 경남은 단협을 통해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 개선을 이뤄냈다.

노동자들은 이런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에는 처우를 더 많이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른 비정규직 교강사들과 정규직 교사들과의 연대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권정임 경기영전강 분과장은 이날 집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전교조 투쟁을 지지했다. 또, 같은 비정규직 강사인 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직종을 넘어 연대를 확대하고, 전교조의 선진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교강사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에 나선다면 “형평성” 운운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맞서 교육노동자 전체의 힘이 커질 것이다.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도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강철구

4월 29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당직,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4000여 명의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직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은 이제 교육감을 사용자로 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당직, 미화 등 노동자들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했다. 기존 교육공무직에게 적용하던 처우개선비를 제공하지 않고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특수운영직군은 교육공무직이 받는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또, 6시간 노동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비와 명절 휴가비도 차별을 뒀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당직과 청소 노동자 수백 명이 간담회에 참여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나마 복지포인트에 대한 차별을 없앴다. 복지포인트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마찬가지로 1년에 70만 원을 받는다.

용역회사에 비하면 약간 나아졌지만, 임금 인상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대로, 교육청이 기존 용역회사에 지급하던 액수만큼만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내 차별을 두는 것은 장차 기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는 “학교 안에서 교사,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과의 차별에 이어, 이제는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과의 차별을 만들어 낸다”며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처우는 열악

교육공무직경기지부 당직분과장은 말한다.

“저희는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서 아침 8시 30분에 퇴근합니다. 학교 밖 청소도 하고, 평일 야간에 체육관을 주민에 개방해 관리도 해야 하고, 학생들의 분실물도 챙겨야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16시간 일하는데, 6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용역회사는 4시간 30분~5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이 6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약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지만, 월급이 겨우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심지어 구정과 추석에도 무급 휴가다. 연장근로 수당은커녕 20시간이 넘게 일해도 6시간만 인정받는다.

“8시간 노동을 인정해 주는 것뿐 아니라, 2교대제를 시행하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개인 생활도 할 수 있

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당직 분과장)”

심지어 일부는 임금이 삭감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원 당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8시간 노동이 6시간으로 줄고 상여금도 사라졌다. 이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70만 원이나 삭감됐다고 분노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 삭감은 없다”던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미화 노동자들도 학교 크기나 학생수에 상관없이 한 명이 6시간 안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한다. 이전에 7~8시간 동안 하던 일을 6시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늘어났다. 미화 노동자들의 절반 가량은 마땅한 휴게장소도 없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고용안정도 실질적이지 않다. 현재 일하고 있는 당직 노동자의 93퍼센트, 미화 노동자의 36퍼센트가 65세 이상으로 고

령이다. 그런데 미화와 당직 노동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졌다. 2021년 2월까지의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65세 이상은 매년 신규 공개 채용에 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2021년 새학기에는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우려한다.

특수운영직군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래서 수백 명이 노조로 가입했고, 간담회에 집단적으로 참여해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적 지급을 없애는 성과도 냈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바꾸길 염원하고 있다. 올해 교섭에 대한 기대도 높다.

당직, 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정년을 상향 조정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한화토탈 파업

7000억 원 수익 내도 성과급은 0원?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안우준

한화토탈(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노동자들이 4월 25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3월 말에 5일간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전체 조합원 900여 명 가운데 협정근로(단협으로 정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로 지정된 조합원을 제외한 750여 명이 매일 공장(충남 서산군 대산읍) 안에서 집회를 열고, 100만 명이 넘는 공장 안을 기세 좋게 행진하며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장이 정기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해야 하는 시점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석유화학업체 특성상 하루라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측이 수백억 원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노조는 이미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측이 무리하게 재가동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전면 파업 둘째 날인 4월 26일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때에 사측이 무리하게 재가동하려고 하면 언제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며 또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실적에 비해 낮은 임금,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 비중은 높은 열악한 임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다.



4월 29일 한화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는 한화토탈 노동자들

3월 말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자, 경제지를 포함한 보수 언론들은 “역대 연봉 받으면서 임금 더 달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한화그룹이 삼성토탈을 인수한 이후, 한화토탈은 매년 막대한 실적을 올려 왔다. 5년간 영업이익이 5조 원이나 된다. 석유화학업계 호황 시기인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속으로 1조 5000억 원가량을 벌었고, 불황으로 접어든 2018년에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 한화토탈이 한

화그룹의 복덩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런 막대한 수익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기 보수 기간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월 300시간에서 340시간까지 일해야 했습니다.”(김수환 노조 후생복지부장)

그런데 한화토탈 임금 체계는 성과급 비중이 35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높다. 게다가 회사 영업이익이 7000억 원으로 떨어지면 성과급은 제로가 된다고 한다. 석유화학업계 업황이 나빠지

고 있으니, 조만간 임금이 3분의 1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파업 찬성률이 86.2퍼센트로 높게 나온 까닭이다.

게다가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것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사측은 단협상 통보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의원 대회, 노조 수련회 참가에 대해 만지를 걸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는 등 협박을 했고, 수련회를 위해 섭외해 둔 버스를 회사가 개입해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노조 상급단체 출입조차

막기도 했다.

회사의 협박은 파업 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측은 협정근로 숫자를 부풀려, 노조와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불법’, ‘손배소 청구’를 운운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 활동까지 방해하며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석유화학업계가 지난해부터 불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한국에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사측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란산 원유는 싸고 질이 좋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큰 이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더 비싼 다른 나라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면 수익이 더 줄어들 공간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고정급 임금 인상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이다.

한화토탈 조합원 대다수는 매일 진행되는 파업 집회와 행진에 열의 있게 참가하고 있다. 4월 29일에 한화 본사 앞 상경 투쟁을 하고, 5월 1일에는 천안에서 열릴 세종충남 세계 노동절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웹사이트에 4월 29일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상경 투쟁 소식이 실려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조급이라도 임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우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동시에 연대와 지지가 확대돼야 승리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19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9

8월 22일(목) ~ 25일(일)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marxism@marxism.or.kr



찰리 김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SWP 공동 사무국장이자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이다. 국내에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왜 혁명인가?》(공저, 책갈피)와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공저, 책갈피)가 번역 출간돼 있다.

발표 주제

- ★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 ★ 새 극우와 파시즘
- ★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 인터넷 시대에도 혁명적 신문이 여전히 유효할까? 등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운영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홍주민
한국디아코니아 목사

김형계
노동전선 대표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이상운
노동건강연대 대표

※ 발제자들이 계속 추가로 섭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marxism.or.kr을 보세요.

맑시즘2019에서는 한국 정치, 노동자 운동, 개혁주의, 제국주의, 여성차별, 난민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쟁점들을 토론합니다. 또,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그람시 등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그 사상, 혁명의 역사들도 토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marxism.or.kr을 보세요.